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국민신문고로 본 청년의 요구

2026. 7.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목 차

I. 분석 배경	1
II. 민원 현황	2
III. 주요 민원 유형 및 사례	4
1. 병 역	4
2. 일자리	7
3. 자산형성	11
4. 주 거	14
5. 임신·출산·육아	18
IV. 정책 시사점 및 개선방향	22
V. 조치 사항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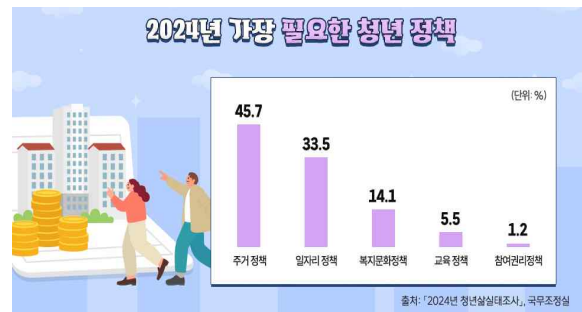
I. 분석 배경

□ 청년들의 고충 심화

- 최근 경제지표의 개선과 일부 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확보, 자산 형성 등 삶의 기반 마련에 어려움* 존재

(대통령 말씀)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다. 역대급 성과급,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26.6.23. 국무회의)

* 청년 3명 중 1명은 미취업 상태(미취업 비율 32.3%), 취업 청년의 월평균 소득 266만 원, 고립·은둔 청년 비율 5.2%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소)



※ 출처: '청년이 바라는 미래 통계로 읽다'(국가데이터채)

-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정('20.2월) 이후 일자리·주거·금융·복지 등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
 -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이 정부에 요청하는 정책수요를 파악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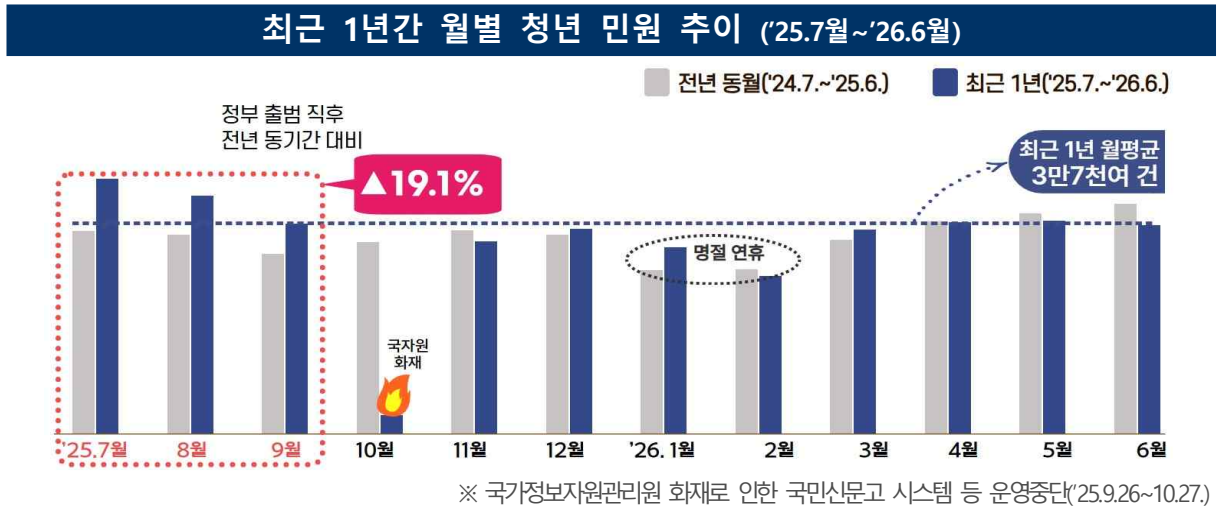
□ 국민신문고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 분석 필요

- 국민신문고는 청년들이 인생에서 경험한 불편사항과 정책 개선요구를 제기하는 창구로, 민원은 실제 정책 수요와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데이터
- 최근 1년간('25.7.~'26.6.) 청년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을 분석해 청년의 주요 정책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관계 부처에 전달함으로써 정책 개선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Ⅱ. 민원 현황

① 민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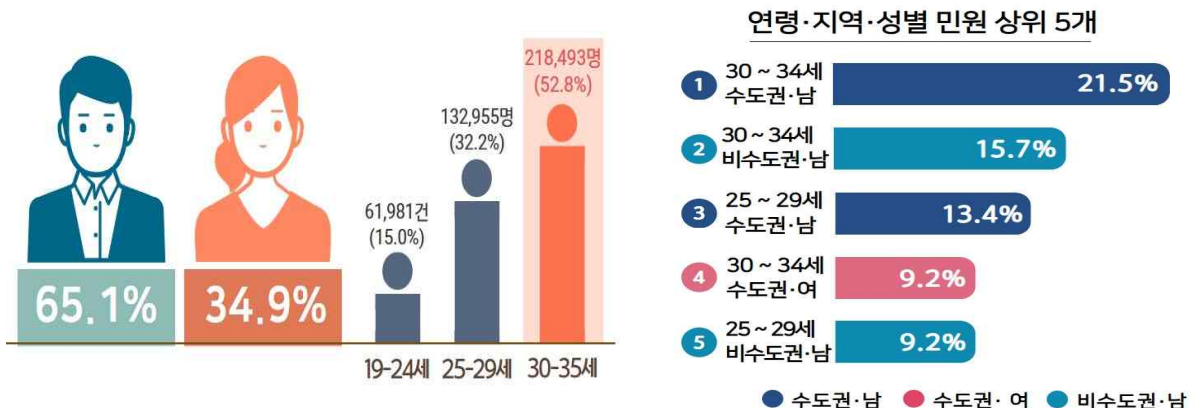
- 최근 1년간('25.7.~'26.6.) 청년* 세대가 제기한 민원은 약 41만 건으로 월평균 약 3만7천여 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월평균 약 3만5천여 건) 대비 약 5% 증가
* 19세 이상 34세 이하(「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 특히 정부 출범 후 3개월('25.7월~9월)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9%가 증가해 새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기대가 민원으로 표출된 것을 확인

② 신청인 현황

- 청년 민원은 남성(70.1%), 30~34세(52.8%), 수도권(58.2%)이 주로 제기
- 연령·지역·성별 교차 기준 상위 5개 유형이 전체 민원의 69% 차지, 특정 연령·지역·성별 그룹에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 확인



연령·성별·지역별 주요 민원 상위 TOP 5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순위	주요 민원	순위	주요 민원	순위	주요 민원		
남	1	사회복무요원 복무 신고 등	1	군 경력증명서 발급	1	군 경력증명서 발급		
	2	군 경력증명서 발급	2	예비군·민방위 불만	2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3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3	자격증 시험 이의신청	3	인천2호선 고양연장		
	4	자격증 시험 이의신청	4	GTX-C 변전소 반대	4	주택공급·대출, 전세사기		
	5	예비군·민방위 불만	5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5	근로·고용 신고, 질의		
여	1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	여대 공학전환 반대	2	근로·고용 신고, 질의	2	통학구역 조정 요구		
	3	원격대학 자격 취득 반대	3	동물복지	3	근로·고용 신고, 질의		
	4	자격증 시험 이의신청	4	자격증 시험 이의신청	4	주택공급·대출, 전세사기		
	5	근로·고용 신고, 질의	5	GTX-C 변전소 반대	5	육아정책 문의 등		
수도권	1	사회복무요원 복무 신고·질의	1	GTX-C 변전소 반대	1	인천2호선 고양연장		
	2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	군 경력증명서 발급	2	주택공급·대출, 전세사기		
	3	군 경력증명서 발급	3	예비군·민방위 불만	3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4	자격증 시험 이의신청	4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4	근로·고용 신고, 질의		
	5	여대 공학전환 반대	5	자격증 시험 이의신청	5	통학구역 조정 요구		
비수도권	1	사회복무요원 복무 신고·질의	1	군 경력증명서 발급	1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	군 경력증명서 발급	2	자격증 시험 이의신청	2	군 경력증명서 발급		
	3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3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3	근로·고용 신고, 질의		
	4	자격증 시험 이의신청	4	예비군·민방위 불만	4	태양광 개발행위 문의		
	5	원격대학 자격 취득 반대	5	근로·고용 신고, 질의	5	자격증 시험 이의신청		

병역

일자리

주거

임신·출산·육아

병역
 일자리
 주거
 임신·출산·육아

○ (성별) 남성(70.1%)이 여성(29.9%)보다 많이 제기

-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병역 민원이 가장 많고, 여성은 일자리 및 동물복지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육아 민원 증가

○ (연령별) 30~34세(52.8%)가 가장 많으며, 25~29세(32.2%), 19~24세(15.0%)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민원 증가

- 병역이행, 취업, 결혼·출산, 주거 마련 등 청년의 연령대별 정책 수요와 맞물려 민원 제기하는 경향

* (19~24세) 병역(사회복무요원, 군경력증명서), 자격시험 등 **입대·취업준비** 민원

* (25~29세) 병역(예비군, 군경력증명서), 자격시험, 지역현안(변전소) 등 **병역·취업·생활** 민원

* (30~34세) 주택공급·대출, 근로·고용, 육아휴직 등 **일자리·주거·결혼출산** 민원

○ (지역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8.2%, 비수도권 41.8%로 수도권 비중 높음

- 수도권은 GTX-C·인천2호선 등 지역현안 및 주택공급·대출 민원이, 비수도권은 취업준비 및 근로·고용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음

Ⅲ. 주요 민원 유형 및 사례

- ◇ 청년 민원은 연령대(병역→취업→주거자산형성→결혼출산)에 따라 정책 수요가 이동하며, 신규 정책 마련보다 기존 제도의 개선을 요구

1 병역

- ◇ 군 복무·예비군·군 경력증명서 발급 등 병역 민원은 남성 중심으로 제기, 연령 및 지역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
 - 특히 군 경력증명서 발급,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불편 민원이 다수 접수

① 군 경력증명서

- 군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민원은 전용 창구(국방 증명서 발급 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느껴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청 다수 접수
 - (온라인 발급 사각지대) 현재 '국방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육군만 가능하고, 해군·공군·해병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 또한 전역 후 2개월 내이거나 영문 증명서는 시스템 발급 어려움
 - (온라인 발급 불충분) 단순 직책만 기재, 업무 내용 미기재로 취업 시 활용이 어렵다는 민원 제기

[발급 사각지대]

- 해군은 전역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신문고 민원을 작성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방 증명서 발급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해군의 경우 국민신문고로 안내될 뿐입니다. 육군의 경우, 발급 시스템 사이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에는 왜 적용하지 않고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력, 민원 접수 처리 과정을 야기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6.4.)

(참고) 관련 언론보도

육군은 되고 해·공군은 안되는 경력증명서 즉시 발급... "조속히 개선해야"

정홍신 선임기자 입력 2024-10-02 11:50 수정 2024-10-02 11:50



문화일보(24.10.2.)

- 국방 증명서 발급시스템에서는 영문으로 뽑을 수 없어서 병무청에 전화해보니 민원을 넣으라고 하셔서 신청합니다. 군 경력증명서(한글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기관 제출을 위한 공식 영문 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25.9.)
- 군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국방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였지만, 전역일 이후 2달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여 국민신문고 통하여 부탁드립니다. ('26.3.)
- 주민센터에서 2017년도 이전 전역자는 증명서 발급 불가하고 국민신문고로 받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공무원 경력환산 제출용 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26.6.)
- 현재 전역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국방 증명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 불가(전역일이 2달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군 체계 내 발급 불가(전역으로 인한 계정 삭제), 국방부 방문 직접 불가 (영문본은 직접 수령 불가) 위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5.7.)

[발급 불충분]

- 간부 전역자들의 재취업 과정에서 군 경력증명서를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명서에 세부직무, 업무내용에 대한 부분이 미기재되어 있어 경력을 인정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해당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12.)
- 소속 부대에서 업무 수행 내용을 기입하기 위해 군 경력증명서 발급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 내용을 군 경력증명서에 기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해당 부대에서 확인 후 군 경력확인서에 업무 내용 기입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민원 접수합니다. ('26.4.)
- 청원경찰 및 방호직공무원은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데 방호·보안·경호·경비 등 업무를 했을 때만 인정해줍니다. 군 경력증명서에서 단순 직책만 기재된 이유로 경력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경력확인서를 요청합니다. ('26.1.)
- 소방에 꿈이 있어 경력을 위해 확인해보니 군 경력증명서에 따로 업무내용이 작성되어있지 않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군 생활 당시 했던 업무인 환자 상담, 응급처치, 구급차 탑승 및 이송 업무 기재 부탁드립니다. ('26.2.)
- 폭발물처리(EOD) 관련 채용 지원을 준비 중이며, 군 복무 당시 수행했던 폭발물 처리 관련 업무 및 교육 이력을 증명하기 위해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군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상세 내용이 포함된 형태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5.8.)

② 예비군 훈련

- 예비군 훈련 관련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으로 △거주지와 무관한 훈련장 배정, △폭염·한파 시 훈련 강행, △훈련비 지급 지연, △훈련기간 개인 연차 사용 강요 등의 내용 다수 접수

[거주지와 무관한 훈련장 배정]

-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예비군훈련소집이 대구로 2년째 나오고 있는데 이동 거리가 너무 멍니다. ('26.5.)
-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가 서울입니다. 첫 예비군 소집은 서울로 배정이 되었는데 작년부터 원주로 소집이 되는지 이유와 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26.3.)

[폭염·한파 시 훈련 강행]

- 금일 매우 기온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 고려 없이 이루어져 온열질환 위험을 느꼈습니다. 향후 폭염 상황에서는 훈련 강도를 조절 부탁드립니다. ('26.5.)
- 한파주의보가 반복되는 혹한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교육을 야외에서 강행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비군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 필요합니다. ('25.12.)

[훈련비 지급 지연]

- 올해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급부대 예산 부족,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3달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5.11.)
- 훈련 당시 훈련비 지급은 약 2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급 일정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도 정확한 사유나 확정된 지급일을 안내하지 않는 것은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6.6.)

[예비군·민방위 훈련 관련 직장 내 불이익 신고]

- 본인은 해당 훈련 기간을 근무일로 편성하고 공가(예비군훈련 휴가)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여태껏 예비군 간 남자 직원들 전부 개인 휴가 쓰고 갔다"는 식의 논리를 펴며, 훈련 기간 3일 중 2일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25.12.)
- 본인은 작년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수령한 후 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사측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공가'를 부여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 연차(반차)를 사용하여 다녀오도록 강요하였습니다. ('26.4.)

- ◇ 취업지원, 자격시험(자격증), 근로·고용 등 일자리 관련 민원은 비수도권 청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기
- 자격시험 관련 민원은 남성 비중이, 근로·고용 관련 민원은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자격시험 관련 민원은 주로 자격증 시험 관련한 단순 이의제기가 다수로, 시험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 오류 신고 등이 주로 접수

① 취업지원

- 취업지원 관련 민원은 국비 직업교육훈련의 운영방식 개선 요청, 취업 취약청년 대상 지원 확대 요구 등의 내용으로 접수
- (직업훈련과정 운영) ‘고용24’ 등을 통해 안내된 교육내용이나 자부담 비용 등 정보 불일치, 교육과정 품질 저하 등에 대한 불만, 직업훈련 교육지원 확대 등 요구
- (노동시장 진입 지원) ‘쉬었음 청년’, 구직단념청년 등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 대상 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 제기

[국비훈련과정 운영]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는 ‘AI 활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업에서는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루진 적이 거의 없어 교육 안내 내용과 실제 운영 간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국비지원 훈련은 국민의 세금과 훈련생의 소중한 시간이 함께 투입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안내된 교육 내용과 실제 교육 운영 간의 일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26.6.)
- 교육 자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40만원만 내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600만원 가량을 내야한다는 기관의 전화를 받았고, 이렇게 민원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26.5.)
- 고용24에서 ‘생성형 AI’ 과정을 신청하였는데, 수강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업용 AI 도구를 제공받지 못했고, 수업용 PC는 오래된 장비

여서 「생성형AI 기반」 및 「AI 융합」 백엔드 개발자 과정의 실습용 장비로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 강사의 최신 AI 개발도구 이해도, 지급 교재 미사용, 강의실 배선 및 시설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 품질 검증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세요. ('26.6.)

- 국내 20~30대의 전략 산업을 국가비용으로 지원되는 과정은 대부분 KDT*에 참여있습니다. 로봇,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엔지니어, 임베디드 등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 산정된 금액을 보면 1500만원~2200만원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즉, 자비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빵이나 타 기공직군 훈련은 국가비용으로 처리하기에 충분하지만 KDT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5년에 한 번 지원이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3년에 1회씩은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26.5.)

* (참고) KDT(K-디지털 트레이닝): AI, 클라우드,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취업·창업을 위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

- 실업급여 신청 후 내일배움카드 신청한 신청자입니다. 직업 훈련 및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어학 관련 수강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수강 과정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시정 요청 드립니다. 어학 능력 및 실력은 취업 평가에 있어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학 기관의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등록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고 및 홍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어학 분야도 한 국가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걸맞춰 국가 다양성을 고려한 어학 수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26.2.)
- 현행 내일배움카드 한도 증액 신청 자격에는 저소득 프리랜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접근이 더욱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내일배움카드 및 취업지원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현실적인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1.)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은 '쉬는 청년'을 양산하는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구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격증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선심성 사업의 사후 관리를 강화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6.5.)

-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이 방 한 칸에 스스로를 가두는 '은둔형 고립' 상태로 전이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 상승과 인적 자산의 소멸이라는 심각한 득실 차를 발생시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실제 구인 수요 간의 '미스매치 노이즈'를 해결할 정교한 직업 훈련 프로토콜을 가동하고 중소기업의 복지를 개선하여 청년들이 '로그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26.5.)
- 2024년 54만 명에서 올해 71만 명으로 조사된 쉬었음 청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업과의 매칭도 좋은 대책입니다. 그러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무조건적인 기업 매칭은 적응의 불안을 야기합니다. ('26.1.)

② 근로·고용

- 근로·고용 민원은 최저시급 미준수, 임금체불, 퇴직금·실업급여 관련 위법사례 신고 민원이 다수를 차지

[최저시급 미준수 및 임금체불]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최저시급 이하의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약속된 급여일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지만, 사업주는 이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시급을 책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청드립니다. ('25.12.)
- 점주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이었고 2025년은 10,030원이었으나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8,500원만 지급하였습니다. ('25.11.)
- 근무 기간 내내 주휴수당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4년 10월에 근무한 임금은 아직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시 사장님께서 '얼굴 보고 주겠다'며 계좌이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 체불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25.12.)
- 해당 현장에서 준공 후 하자보수까지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약 6개월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하도급 업체는 원청 정산 지연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어 원청 측에 직접

연락하여 지급 관련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현장 담당자에 연락이 와서 '하도급 업체와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였습니다.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구조에서도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며, 원청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된 점, 그리고 원청과 하도급 간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단순한 지급 지연이 아닌 구조적인 임금체불 문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저 포함 2명 총 3명이 지급 공사가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돈을 못 받아서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26.5.)

[퇴직금·실업급여 등]

- 현재 국가에서도 인지하고 있듯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의도적으로 364일로 설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2024년과 2025년, 동일한 직장에서 각각 364일 계약 형태로 근무하였고 그 결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업무, 같은 자리에서 단 하루(1월 1일)만 제외한 채 연속적으로 근무를 이어왔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노동지청에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문제가 더욱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지급명령까지 이루어진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2030 청년들은 안정적인 공공기관 계약직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장기 근무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으며, 364일 계약 형태로 인해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6.5.)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게 되었으나 사업장에서는 제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바로 옆에서 사직 사유는 개인사정(이직)으로 쓰라고 하여 저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되었으나, 사업장에서는 퇴사 사유 변경을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본인은 사업장과 고용센터 사이에서 퇴사 사유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운 난감한 상황입니다. ('26.3.)
- 저의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가까웠습니다. 고정적인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민원인은 실질적인 근로자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26.6.)

- ◇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자산형성 정책금융 관련 민원은 사회 초년생인 25~29세 비중이 상대적 높으며 성별, 지역별로는 편중 없이 제기
-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여러 청년 자산형성 정책금융과 관련하여 각 사업간 연계 강화, 운영기준 개선, 대상 선정의 불합리성 해소 등 요구
- (사업연계 및 운영기준) 청년미래적금 전환가입(~'26.7.3. 허용, 現 종료) 기간 연장 요청,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기준(생애최초주택 등기 완료 후 신청) 등 개선 요구
 - (선정 기준) 청년 자산형성 정책금융 대상자의 선정 기준으로 부모·부부소득 등 가구소득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불만 제기

[청년미래적금 전환가입 기간 연장 요청]

- 정부에서 안내한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전환 특례를 이용하고자 청년 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직전연도 소득이 없어 가입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거절되면서 청년도약계좌 전환 특례 또한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전환 특례는 올해 최초 가입 기간에만 허용 되는 것으로 안내받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저는 다시 근로를 하고 있어 올해에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전환 특례 기간이 종료되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없게 됩니다. 즉, 현재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이 직전연도 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올해 한 번뿐인 전환 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직장을 옮기거나 일시적으로 소득 공백이 있었던 청년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일시적인 소득 공백으로 인해 전환 기회 자체를 잃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6.7.)
- 만약 청년형 ISA,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2026년 6월 중 청년형 ISA의 세부 구조가 발표되지 않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형 ISA 가입을 염두에 두고) 기존 도약계좌를 유지하는 선택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추후 발표된 청년형 ISA의 혜택이나 투자 조건이 청년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무 계획과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6월 한정 특별중도해지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발표 지연(시차)로 인해 청년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후 청년형 ISA 가입 조건 및 세부 내용이 최종 확정·발표된 시점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특별중도해지 및 전환 기회를 한시적·사후적으로 추가 부여할 예정입니까? ('26.5.)

- 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 신청 기간이 약 2주로 매우 짧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상품은 기존 금융상품 해지 여부나 갈아타기 판단 등 비교·검토가 필요한 구조라 단기간 내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보를 늦게 알았다”,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은 정보 접근 속도에 따라 참여 기회가 크게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 연장 또는 추가 접수 기간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26.7.)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관련 개선 요구]

- 최근 청년도약계좌 해지 과정에서 특별중도해지 사유인 '혼인'에 해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특별중도해지가 아닌 일반중도해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이 생애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실제 요건 충족 여부를 전제로 이미 완료된 일반중도해지 건에 대해서도 특별중도해지로의 정정 또는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바일 해지 절차 내에서 특별중도해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절차 마련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26.6.)
-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여 납부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이 필요하여 특별중도해지를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과 통화했습니다. 답변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였습니다. 특별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주택 구입 후 등기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처리했지만, 큰 돈이 필요한 '잔금'에 돈을 보태려고 했는데 말이죠. 추후에 비슷한 문제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6.6.)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이 필요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려고 하니 주택 취득(등기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만 중도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주택을 사기 전에 해지를 해줘야 청년이 생애 첫 주택구입에 도움이 되지 구매 이후에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로만 청년을 위한 상품이라고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방안으로써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와 부동산계약서를 기준으로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6.1.)

[가구소득 기준의 불합리성 해소 요청]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에서 부모·가구소득, 동일 세대 여부 등을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성년 청년은 세금, 근로, 계약, 금융거래, 채무 등에서는 독립된 개인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정책에서는 부모와 같은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소득과 가구소득까지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정책에서 생계·주거 취약계층 선별이 목적일 때와 청년 본인의 자립·취업·초기 자산형성 지원이 목적일 때는 소득판정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또한 가구소득을 반영하더라도 단순히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생계분리, 주거분리, 건강보험 피부양 여부, 본인소득, 본인재산, 부양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6.7.)
- 청년을 위한 혜택에 관심이 많은 07년생입니다. 갓 성인이 된 저는 가족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아 이른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면서 모두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모은 돈으로 청년계좌를 만들려다 보니 가족의 소득 때문에 신청 자체가 안되거나 동의를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족의 소득분위가 높아 저는 대부분의 청년 혜택, 장학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가족과 절연한 청년들도 가족의 소득과 동의를 필요하지 않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6.5.)
- 결혼한 지 1년 차 직장인입니다. 혼인신고로 인해 배우자가 국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혜택을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와이프의 경우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으나 가구소득 초과로 거절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가구소득이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저의 배우자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사례입니다. (25.7.)

- ◇ 주택공급·대출, 전세사기 등 주거 관련 민원은 30~34세 비중이 월등하게 높으며,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경향

① 주택공급·대출

- 특별공급 요건(신혼 7년, 영유아 다자녀 등) 완화, 정책대출(버팀목, 디딤돌, 신생아 특례 등) 기준 현실화 등 요구
 - 특히 정책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에 대한 불만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민원 다수

[특별공급 요건 완화]

- 현행 신혼 기준 7년은 자산 형성이 안 된 청년 세대가 수도권의 높은 집값을 감당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7년이 지나 '신혼' 딱지가 떨어지는 순간,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부부는 '청약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26.6.)
- 배우자와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입니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 분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모든 기회에서 차단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의 한계: 아이가 셋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없다는 이유로 가점에서 밀려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의 모순: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 자녀가 있으나, 무주택 세대주인 본인이 장애인인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기간 제한: 혼인 7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른 가정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현행 청약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요청합니다. ('26.2.)

[정책대출 기준 현실화]

- 정부의 핵심 저출생 대책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 분양 청약 제도상의 세부 당첨 단계 분류 방식으로 인해 실제 출산 가구가 입주 시점 대출 혜택에서 배제되는 치명적인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지침에 따르면, '신생아 특별

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를 초과 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어 아파트 공사 기간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간분양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트랙으로 청약 접수를 하였더라도, 하위 단계인 우선공급이나 추첨 단계에서 최종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예외 조항(만 2세 초과 수용)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보수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간분양의 청약 구조상, 신생아 우선공급 신청자는 낙첨 시 자동으로 우선 공급 및 추첨 단계로 전환되어 경쟁하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심사 시, 최종 당첨된 세부 단계(우선/일반/추첨)와 무관하게 '최초 청약 접수 유형이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신생아 우선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내 신생아 트랙 포함)인 경우' 지체 없이 만 2세 나이 제한 예외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출 업무 지침을 명확히 수정해 주십시오. ('26.6.)

- 정부가 '결혼·출산 페널티 해소'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연 2억 원으로 대폭 완화해 주신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침상 '신규 주택 구입'에만 연 2억 원 기준이 적용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에는 여전히 부부합산 1.3억 원이라는 과거의 엄격한 기준이 고수되고 있어, 현장에서 수많은 맞벌이 출산 가구들이 심각한 형평성 상실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은 평범한 직장인 맞벌이 가구라면 너무나 쉽게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아이를 낳고 성실히 맞벌이를 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 미리 집을 사고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 시기에 대환대출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은 이미 자녀를 출산해 키우고 있는 유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추가 출산'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정된 기금 재원의 한계는 이해하지만,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구입과 대환 대출 간의 차별 없는 소득 기준 일원화(연 2억 원 이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6.6.)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출산가구의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운영 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 신규 주택 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까지 지원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초과 시 대환이 제한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 전 성실하게 근로하여 주택을 구입한 가구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출산장려 및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동일한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신규 구입 여부와 대환 여부에 관계없이 맞벌이 소득기준을 2억원 이하로 동일 적용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26.6.)

-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에서 청약을 도전하고 당첨되는 경우 신축 분양 입주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됩니다. 입주 시기, 출산 시기 현실을 반영하여 신혼부부가 출산했을 시 7년 이내 또는 입주 시점 기준으로 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취득세 감면의 '신생아 인정 기간' 역시 현실과 불일치합니다.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25.12.)
- 청년 정책은 '나이'와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정해져야지, 혼인 연수로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청년 층이 실질적으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부부 합산 소득 7,500만원 초과를 이유로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개인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혼인신고 후 합산 소득으로 잡히면서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혼인신고를 제때 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26.3.)
- 현재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의 개인 소득 기준은 연 5,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연 7,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실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혼인신고를 고의로 미루는 '서류상 미혼' 가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6.3.)
- 현재 많은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단독 가구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결혼하는 순간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청약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26.6.)

② 전세사기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기준 관련 불만, 지원정책의 지방정부별 편차 해소 요청 등 제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기준 관련 불만]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소득 제한은 미혼 가구 7천만 원, 부부합산 가구 7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혼인 페널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일반 디딤돌대출 및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환대출이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있듯이, 피해자

전용 상품 역시 기혼 가구의 합산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최소 1.3억 원 이상 등) 즉각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6.4.)

-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용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7,0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졸 초임 연봉 상승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맞벌이 부부가 합산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드뭅니다. 저출산 대책인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은 최근 2억 원까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반면,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기준은 여전히 과거의 잣대에 머물러 있어 정책 간의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26.2.)

[지방정부별 편차 해소 요구]

-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일부 이주비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와 예산에 따라 운영된다는 이유로, 현재 거주지가 피해 발생 지역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6.6.)
-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아 현재 관련 민사 및 형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대전에서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생계 문제로 인해 수원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지원사업이 특정 지역 거주자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 사회문제로서 피해자 인정 여부가 핵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의 개선 가능성 및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과정에서 지자체별 해석 차이로 인해 피해자 구제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가구 수 제한을 이유로 '쪼개기 건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대부분 거절되고 있으며, 그 결과 LH 매입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승인되어 LH 매입 및 피해자 주거 안정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26.2.)

- ◇ 육아정책(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 임신·출산 관련 민원은 30~34세에서 주로 제기되며, 여성 비중이 높음

① 일·가정 양립 제도

- 육아정책 미승인, 육아휴직 기간 임의 축소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현장 미이행 사례에 대한 신고가 다수
 -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의 보완 및 신속한 지원금 지급 요구 등도 제기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미승인]

- 재직 중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측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 대신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부당한 것 아닌가요. ('26.1.)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속 부서 내에서는 직속 상사가 "사내 규정상 육아휴직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회사 내부 전산 또는 자체 양식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서 결재 자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6.2.)
- 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교대근무 체계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25.8.)
- 저는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나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금지된 무리한 업무 지시, 직장 내 따돌림, 협박성 발언 등을 수차례 겪어 진정을 드립니다. ('25.12.)
- 사립유치원에서 근무 중인 교사가 임신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계약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26.3.)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보완 요청]

- 얼마 전 육아기 단축근무로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차를 하루에서 시간으로 차감해 단축 근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차감된 연차를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단축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육아기 단축근무자를 고용한 사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묵인하고 근로자의 눈을 가리거나 근로자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보다 연차를 더 준다는 생각이 들어 손해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을 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6.3.)
- 정부는 홍보물과 보도자료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여 소득 감소 없는 단축 근무를 보장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저 역시 이 '100% 보전'이라는 말을 믿고 단축근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한 결과, 홍보는 명백한 기만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100% 보전'은 실제 근로자의 임금이 아닌, 임의로 정해둔 상한액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대다수의 숙련직 근로자나 중산층 가정은 단축근무를 선택하는 순간, 정부 홍보와 달리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월 250만 원이라는 상한액 기준은 현재의 물가 상승률과 평균 임금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경제활동의 중추인 세대가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 허점(상한액)으로 막고 있습니다. 현재 250만 원으로 묶여 있는 통상임금 상한액을 최소한 실제 중위소득이나 현실적인 임금 수준에 맞춰 즉각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26.3.)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요구]

- 저는 아이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육아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이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아 신용도 하락, 대출 연체 등 현실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게 느껴질 수 있는 금액일지 몰라도,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가는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에게는 생활의 전부입니다. 센터에 따라 급여 지급 처리 속도도 들쭉날쭉하고, 담당자 연결도 어렵습니다. 신청 건수가 많다면 담당 인력을 보강해주시고, 육아 단축근무 급여 지급 기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주십시오. 저처럼 한 달

생활비로 하루하루 버티며 아이를 키우는 시민들에게 지급 지연은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도 벅찬데, 급여 지급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5.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월급이 감소한 상태이며, 해당 급여가 지급되어야 생활비를 계획하고 각종 고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신청한 다른 신청자들은 이미 지급받았는데 신청 건마다 지급 시기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 및 지급일자의 변동이 너무 크다는 대해서도 문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정 처리기한만 반복적으로 안내받아 민원인으로서 상당한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며, 많은 신청자들에게 생활비와 직결되는 중요한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자가 현재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6.)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신청하면 3주나 걸린다는데,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동일한 날짜에 매월 신청하지만 매월 지급되는 일자가 다른데 신청 5일 만에 처리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 아쉽네요. (‘25.9.)

② 출산·난임 지원

- 시험관 시술 건강보험 차수 제한 폐지, 남성 난임 지원 등 난임 지원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출산 지원 대책 요구 등

[난임 지원 확대]

- 첫아이조차 품지 못해 절벽 끝에 서 있는 난임 부부들에게 현재의 차수 제한은 ‘돈이 없으면 출산을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적어도 ‘첫아이 출생’에 한해서만큼은 시험관 시술의 차수 제한을 폐지해 주십시오. (‘26.5.)
- 건강보험 난임치료 시험관 시술 차수 제한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가계 경제상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 난임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게스테론 제재 등 여러 약제와 처치는 이미 비급여로 환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시험관 시술 건강보험 차수 제한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6.1.)
- 현재 남성 난임 관련 지원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무정자증 등 남성 요인 난임에 대해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

결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거주 지역에 따라 치료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난임 지원정책은 여성 중심을 넘어 부부 통합 관점으로 균형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26.3.)

[자영업자·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확대]

- 근로자의 경우 국가의 고용보험 재원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사업주 또한 인력 공백 및 운영 부담을 함께 감수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는 사실상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중단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출산 이후 최소 수개월 동안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영업자는 일을 멈추는 순간 바로 소득 공백과 사업 유지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자 중심의 정책을 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부모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5.)
- 저는 임신 중인 1인 여성기업 사업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출산 후 사업 운영이 걱정입니다. 여러 곳에 문의를 해봐도 법 쪽으로 지정된 게 없어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습니다. 직장인 임신부에 대한 혜택은 많아지는 반면에 사업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사업자는 3달에 걸쳐 총 150을 받는 게 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대신 다른 분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해야 유지되는데, 3달에 걸쳐 150 받는 걸로 알바를 고용해도 한 달은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26.3.)
-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각각 최대 1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한쪽 배우자(근로자)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 혜택이 사실상 근로자 부부에만 한정되어 형평성 저하됩니다. 자영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일정 요건 하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유사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적용 대상을 ‘부부 모두 근로자’에서 ‘한쪽이 자영업자인 경우’까지 확대 검토, 자영업자에게도 출산·육아 기간 동안 소득 보전이나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가정 형태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

IV. 정책 시사점 및 개선방향

- ◇ 청년세대는 입대·취업 준비부터 노동시장 진입, 자산 및 주거 기반 마련, 가족 형성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정책 수요가 변화
 - 새로운 정책의 도입 요청 보다는 기존 제도의 복잡한 기준, 운영상 불편, 현장 미이행 및 지원 사각지대 개선 요구가 다수
 - 연령대별 확인된 요구를 바탕으로 분야별 정책 개선 사항 확인

① 병역행정 이용 편의성 제고

- ‘국방 증명서 발급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이용한 군 경력증명서 발급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발급할 필요

(참고) 국방 증명서 발급 시스템



국방 증명서 발급 시스템 누리집 화면

육군 인사사령부 군 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 군 경력증명서는 업무 담당자가 승인 후 발급에 따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군 경력증명서 신청시 아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빠른 시간에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 발급

육군 소속 예비역을 위한 군 복무 기간 중 경력(복무)에 대한 인증자료입니다.
해당 증명서는 병적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발급 가능 대상 및 정보 : 예비역(장교, 부사관, 병) / 현역 발급 제한

1. 장교 : 1986년 이후 전역자
2. 부사관 : 1991년 이후 전역자
3. 병 : 2005년 이후 전역자(1970~2005년 이전 전역자, 보충역은 병무청 병적기록부 발급 신청)

* 주의사항 및 자동반려 사유

1. 군번에 '-' 있는 경우 불허 기입
2. 현역(전직지원교육, 휴직자 포함)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제한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3. 복무 당시와 현재 성명이 다른 경우(가명) : 병무청 성명 정정 요청 → 정정된 후 발급 가능
4. 전산화 이전 전역자는 군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 X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자력표 대체 발급)
5.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상 경력증명서 발급은 전역일자 기준 2-3주 소요 예정(사유 : 자료 아관)

※ 단, 즉시 발급 희망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국방부 및 육군본부 민원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 가능

누리집 내 공지사항

민원 사례	"육군의 경우, 발급 사이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에는 왜 적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민원 접수 과정을 거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군 경력증명서에 세부 직무, 업무 내용이 미기재되어 관련 경력을 인정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부디 해당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 (이용대상 확대) 현재 군 경력증명서의 '시스템' 발급은 육군만 이용 가능, '시스템'을 통한 발급 대상을 해군·공군·해병대로 확대할 필요

- (수요반영 발급) 영문 군 경력증명서 및 상세 직무 내용이 반영된 군 경력 증명서를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국방 증명서 발급 시스템 신청 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정보(직책, 직무 내용, 교육 수료 이력 등)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검토 필요

○ 예비군 훈련 운영 시 훈련자 편의성 제고 방안 모색

- 거주지 인근 훈련장 배정 확대, 훈련비 적기 지급, 훈련 일정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해 예비군 훈련 관련 고충 해결 노력 필요

②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및 근로권 보호 강화

○ 직업교육훈련의 품질관리 강화 및 과정·대상별 지원 확대 검토

- 교육과정 정보, 자부담 비용 및 취업 연계 실적의 투명한 공개와 부실 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주기·한도 및 사용처 확대 검토
- '쉬었음 청년' 등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접근성 및 지원 실효성 제고 필요

*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고용노동부 주관)

민원 사례	"국비훈련은 국민의 세금과 훈련생의 소중한 시간이 투입되는 과정인 만큼, 안내된 교육과 실제 운영 간의 일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KDT(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교육비용이 자비로는 들을 수 없는 수준이라 5년에 한 번 지원이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은 '쉬는 청년을 양산하는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실제 '구직 시장에 진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격증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사후 관리 강화를 건의합니다."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준수, 퇴직금·실업급여 관련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청년 근로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청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 상담체계 마련, 취약사업장 근로 감독 강화 및 청년 대상 근로·고용 권리 교육 확대 등

③ 청년 자산형성 정책금융의 가입·운영기준 개선

-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자산형성 정책금융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변경에 따른 가입자 불이익 최소화 필요
- 중도해지 및 가입기간 산정 기준을 사업 목적에 맞게 현실화하고, 기존 정책금융 가입자의 전환 선택권 보장

민원 사례	"청년미래적금 가입청하였으나, 직전연도 무소득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시적인 청년도약계좌 전환 특례 또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옮겨 일시적 소득 공백이 있는 청년 등을 위해 전환특례 연장 요청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진행 중 자금이 필요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려 했으나 주택 구입 후 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잔금'에 돈을 보태려고 했는데 말이죠.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

(참고) 관련 언론 보도	
결혼·내집마련... 목돈 필요한 청년 외면하는 정부 자산지원책 입력: 2025-12-16 00:04 국민일보를 선택 출처로 추가 '개인투자용 국채'는 최장 20년 만기 개인형퇴직연금도 55세까지 묶여 상품 담보 긴급 대출 등 확대해야  국민일보('25.12.16.)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도약계좌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안돼" A. 윤슬기 기자 승인 2026.06.15 12:03  연합뉴스('26.6.15.)

- 부모·부부소득 등 가구소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청년 자산형성 정책금융 선정기준을 금융상품의 성격 및 청년의 실제 경제적 독립 여부에 맞게 개선 필요

민원 사례	"정부는 청년 지원정책에서 부모·가구소득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와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라 청년 본인의 소득, 근로상태, 자립 준비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내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으나 가구소득 초과로 거절되었습니다. 아내는 최저임금 급여를 받는데 혼인신고로 가구소득이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	--

④ 청년 주거지원 기준 현실화 및 지역격차 완화

- 주택 특별공급과 정책대출의 기준을 청년들의 삶의 여건에 맞게 현실화 할 필요
 - 신혼 기준 기간, 영유아(만 6세 미만) 자녀 가점, 부부합산 소득기준 등 공급·대출 요건의 합리적 조정 검토
 - 주택공급·대출 관련 민원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된 만큼, 수도권 청년들의 어려움 해소 노력 필요

민원 사례	"신생아 특례대출 현행 지침상 '신규 주택 구입'에만 연 2억 원 기준이 적용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에는 부부합산 1.3억 원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고수되고 있어, 현장에서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부부 합산 소득 7,500만원 초과를 이유로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제때 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현행 신혼 기준 7년은 자산 형성이 안 된 청년 세대가 수도권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참고) 관련 언론 보도														
[단독]연 1.3억 넘게 버는 부부, 신생아 대출 '갈아타기' 못한다 서울 6억 아파트 '멸종'인데...정책대출은 5~6억 이하 집만 가능 【부동산 K양극화③】 집값 오르는 데 대출기준 제자리 6·27 규제 후 대입률 대줄 37% ↓ "정책상품, 집값 현실 맞춰 손질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청년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대입률 대출 등 정부의 정책 대출 상품이 있지만 대출 한도가 집값 상승에 못미치는 구조다. 게다가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부채 관리에 들어가면서 정책 대출마저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집마련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대출의 현실화와 함께 내집마련 문턱 자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2년 새 반토막...주거 사다리 '흔들' 송인 / 2026-04-29 18:10:25 실행액·건수 동반 감소...한도 1억5000만원으로 축소 원세에 묶인 청년들, 대출만으로는 전세 진입도 어려워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이 연간 추이 (2023~2025년)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실행건수 (건)</th> <th>실행금액 (억원)</th> </tr> </thead> <tbody> <tr> <td>2023년</td> <td>139,460</td> <td>1,088.4,988</td> </tr> <tr> <td>2024년</td> <td>122,103</td> <td>988.7,785</td> </tr> <tr> <td>2025년</td> <td>83,104</td> <td>685.5,688</td> </tr> </tbody> </table> 2026년 1분기 (1~3월) 실행건수 16,652건 실행금액 1조 4,143억원	연도	실행건수 (건)	실행금액 (억원)	2023년	139,460	1,088.4,988	2024년	122,103	988.7,785	2025년	83,104	685.5,688	SBSbiz(25.6.27.)
연도	실행건수 (건)	실행금액 (억원)												
2023년	139,460	1,088.4,988												
2024년	122,103	988.7,785												
2025년	83,104	685.5,688												
이데일리(26.7.9.)	아시아투데이(26.4.29.)													

-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지방정부별 적용 범위와 지원 수준 차이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피해자 인정, 긴급주거 및 법률·금융지원에 관한 공통 기준 마련과 지역별 집행 편차 점검
 - 피해자 전용 대출의 소득기준 불합리성* 해소 검토
- * 피해자전용 대출 소득기준이 1인과 맞벌이 부부 기준이 동일(7천만원)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소득 제한은 미혼 가구 7천만 원, 부부합산 가구 7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결혼 패널티'입니다.”
민원 사례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 사회문제로서 피해자 인정 여부가 핵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적용시 지자체별 해석 차이로 인해 피해자 구제에 지역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드립니다.”

(참고) 청년 자산형성 관련 언론 보도	
전세사기 원스톱 지원...대전은 되고 세종·충남은 안 된다? 입력 2026.06.26 (07:42) 수정 2026.06.26 (08:38)  KBS뉴스('26.6.26.)	[기획] 지자체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승 김다나 기자 승인 2026.01.18 08:00 지방자치단체, 저마다 전세사기 예방 및 구원책 마련 전세사기 지원 방안 및 기준 통일시켜야 한다는 조언 나와 "기준 통일화하면 혼란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될 것"  매일일보('26.1.18.)

⑤ 일·가정 양립 제도 이행관리 및 출산·난임 지원 보완

-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의 신청 거부, 법정기간 미준수 등 현장 미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조사·시정과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의 적기 지급체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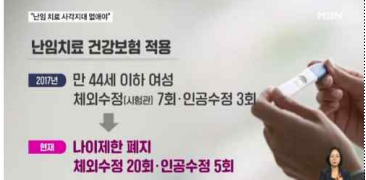
민원 사례	“센터에 따라 급여 지급 처리 속도도 들쭉날쭉하고, 담당자 연결도 어렵습니다. 신청 건수가 많다면 담당 인력을 보강해주시고, 육아 단축근무 급여 지급 기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주시고요. 저처럼 한 달 생활비로 하루하루 버티며 아이를 키우는 시민들에게 지급 지연은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노동부)

- (내용)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
- (절차)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온라인)으로 매월 신청(근무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출산지원 등 제도 사각지대 보완 및 난임 지원 확대 검토
 -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다양한 고용 형태 상황을 반영하도록 폭넓게 검토
 - 시험관 시술 건강보험 차수 제한 폐지, 남성 난임 지원 확대 등 필요

민원 사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는 사실상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중단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난임 부부들에게 현재의 시험관 시술 차수 제한은 '돈이 없으면 출산을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남성 난임 관련 지원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임 지원정책은 여성 중심을 넘어 부부 통합 관점으로 균형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관련 언론 보도		
"자영업자 출산·질병 휴업 사각지대...폐업 예방 '시간 지원' 정책 필요" 한지은 기자 2026.07.16 오전 06:15 전문가 "현금 지원만으론 한계...일·육아 병행 가능한 제도 필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휴업도 권리로 보장해야"  뉴스1('26.7.16.)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정부 지원 끝난 난임부부들의 '눈물'... "치료받으려 대출받고 차까지 팔아" 2025-01-05 07:49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2017년 만 44세 이하 여성 채외수정(시술비) 7회·인공수정 3회 ↓ 현재 나이제한 폐지 채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MBN('26.1.5.)	"돈 많이 들고 수치스럽다"...'속알이' 난임 남성 시술 5년새 12배 급증 김규빈 기자 임대리프 2024.01.15 오후 02:43 문은미·김민아 성균관대 연구팀, 난임 시술 남성 8명 심층 인터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남성 포함해야...사회적 인식 개선도 시급"  뉴스1('24.1.15.)

V. 조치 사항

□ 관련기관 제공

- '국민신문고로 본 청년의 요구' 민원 분석 결과를 관계기관(국방부, 노동부, 금융위, 국토부, 복지부, 성평등부 등) 전달
 - 민원 분석에서 나타난 청년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에 대해 관련 정책 개선 등에 반영 검토 요청

□ 대국민 공개

- 분석자료 공개(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및 보도자료 배포(7.30.)